



강화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범 대응을 위해 민·관 머리 맞대

-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 등 논의 및 대응 모색
-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28.(수) 국내외 ESG 규범 관련 동향에 대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외에 일본, 캐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7개 국가 및 기관들이 금년 2.13일 파리에서 개최된 IEA 각료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최한 ‘무탄소 에너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나가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조민웅 (044-203-4203)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 (044-203-4248)

